

총장로 30년 숙원, 금남로 1가에도 공영주차장 조성

총장로 살리기 프로젝트

금남로1가에 공영주차장 조성
약 300평·18면·시간 당 1400원
복합쇼핑몰 대비 편의성 확보
민영주차장 가격 인하 기대도



‘총장로상가 공영주차장’이 광주 동구 금남로 1가에 조성돼 16일부터 개방된다. 주차면수는 총 18면이며 1시간에 1400원, 하루 최대 8000원으로 운영된다.

광주의 명동이라고 불리는 총장로 상권을 살리기 위해 30년 숙원 사업이었던 금남로1가 공영주차장이 조성·개방된다.

15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동구는 총장로1·2·3가상인회와 ‘금남로1가 입구입시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협약을 맺고 준비를 거쳐 16일 주차장을 개방한다. 동구는 올해 초 수협중앙회와 부지사용 계약을 맺고 2년 동안 주차장 부지를 무상으로 대여하기로 했다. 주차장은 협약에 따라 총장로1·2·3가상인회가 위탁받아 관리·운영한다.

주차장은 광주 동구 금남로1가에 882.3㎡(약 300평) 규모로 지어진다. 주차면수는 총 18면이며 주차요금은 1시간에 1400원, 하루 최대 8000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월권은 따로 운영하지 않는다.

앞서 총장로 상인들은 광주시와 동구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야 상권이 회복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총장로의 상권이 무너진 이유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소

비환경이 변하는 등 쪽 ‘주차장이 부족해서’라고 할 수 없지만, 상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광주 최대 상권이라고 불리던 총장로1~3가에 공영주차장이 아예 없고 인근에 조성된 공영주차장도 중심 상권과 도보로 10~20분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주차장 조성은 광주에 ‘더현대 광주’, ‘신세계 백화점 이전·확장’, ‘그

랜드 스타필드 광주’ 등 복합쇼핑몰들이 들어서게 됐을 때 총장로가 내세울 경쟁력으로 시간이 갈수록 힘을 잃어가던 총장로 상권에 활기를 복돋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또 저렴한 가격 경쟁을 유도해 주변 민영주차장들이 가격을 낮추는 나비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총장로에 조성된 주차장이 적은 수는 아니다. 총장로1~5가에만 ‘NC웨이브충

점점(185면)’, ‘총장주차장(104면)’, ‘삼희주차장(87면)’ 등 7곳이 있고 인근에도 ‘황금주차빌딩(300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차장(275면)’, ‘로머스파크 주차장(244면)’, ‘와이즈파크주차장(107면)’으로 100면 이상의 주차장이 4곳이나 있다. 또 총장로 곳곳에 소규모 민영으로 운영되는 주차장이 다수 영업 중이다.

문제는 주차비용이다. 우리나라 주차장

법에 따르면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노상 공영주차장의 경우 이용시간에 따른 요금체계가 정해져 있다. 이러한 공영주차장은 경차 또는 저공해차량, 장애인 운전자 등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도 존재한다.

그러나 민영주차장에 대한 요금 체계는 주차장법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다. 경차나 저공해차량, 장애인 운전자 등에 대한 요금 감면혜택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한 민영주차장은 이용시간에 따른 요금 체계가 모두 제각각 다르다.

그로 인해 총장로 내 위치한 민영주차장들은 적게는 시간당 3000원부터 많게는 5000원까지 주차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간당 1400원의 공영주차장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민영주차장의 가격 인하가 이어질 것이라고 총장로 상인들은 내다 보고 있다.

정일성 총장로1·2·3가상인회장은 “광주의 중심이자 최대 상권인 총장로 1~3가에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타지역에서 보면 기가막힐 노릇이었다”면서 “30년만의 숙원이던 공영주차장을 이 제라도 조성해 매우 기쁘고 앞으로 생길 복합쇼핑몰에도 총장로 소상공인들이 겪을 타격을 최소화하도록 함께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원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군대 부조리로 조현병 얻었다’… 법원 “보훈보상 대상”

국가유공자는 인정 안 돼

1970년대 군 복무 당시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정신질환을 갖게 됐다고 주장한 예비역이 행정소송을 통해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받았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육군 예비역 A씨가 광주 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보훈보상 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원고 청구 기각)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1979년 육군 포병대대 관측병으로 입대한 A씨는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진행했으나 ‘전환 신경증’ 진단에 따라 끝내 의병전역했다.

이후 A씨는 ‘복무 도중 겪은 육체적 노동, 사고, 폭행 등 외상 경험으로 정신질환이 악화됐다’며 2005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광주지방법원은 ‘해당 질환이 국가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직접 원인이 돼 발병한 것이 아니다’는 이

유로 반려했다. 다만 입대 전에는 정신질환도 없이 건강상태가 양호했지만 입대 이후 선임병들의 구타로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됐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

군복무 당시 A씨의 부대는 사격 교육 훈련 도중 정신착란증세가 일어난다고 대대의무대에 진찰을 받게 시켰고, 심한 육체적 작업을 하면 정신 건강이 망가질 것이라는 의무관 통보를 받고 연대 공사 선발대로 투입했다는 등의 기록이 남겨져 있었으며 A씨 부모가 자택 치료를 희망했지만 거부당했다. 이후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면서 의병 제대했다.

1심은 국가유공자·재해 부상군경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훈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영생활 도중 극도의 스트레스가 유전적 원인과 함께 조현병 발현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현병 발병 이후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병이 악화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민원기 기자

전남교육청, ‘공생 교육’ 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 박차

전남도교육청이 지속가능한 전남 교육을 위해 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을 펼친다.

전남교육청은 15일 본청 중회의실에서 ‘2024 전남도교육청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위원회 정기회’를 열고, ‘지속가능한 전남교육’을 위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은 건강한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남교육청이 22개 시·군과 4년간 업무협약을 맺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전남교육청은 종합평가단을 구성해

2024년으로 협약 기간이 종료되는 6개 지구(곡성, 고흥, 장흥, 강진, 영암, 함평)를 대상으로 서류 평가와 방문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종합평가단의 심사의견서를 토대로 6개 지구의 지난 4년간 진행된 사업의 우수사항 및 개선사항 등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평가단은 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이 △지역의 교육협력체제 강화 △지역연계 학교 교육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광주시교육청·관·학, ‘글로벌 인재’ 함께 키운다

‘글로벌 리더 동네 한 바퀴’ 대학·기관 맞춤형 활동 지원

광주시교육청과 지역 기관·대학이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시교육청은 오는 11월까지 초등학교 1~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24 하반기 학생 글로벌 리더 동네 한바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의 기반 활동으로, 올해 처음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지난 4~6월 초등학교 24개교 22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상

반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하반기 프로그램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지역기관, 대학 등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하반기에는 호남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전남대학교도 참여해 조선대학교, 광주대학교 등 5개 대학이 △디지털 콘텐츠 실습 △환경오락실 △승무원 체험 △그림책, 키링 만들기 △K-음식 만들기 △증강, 가상현실 체험 △K-pop 댄스 배우기 △농구 교실 △배구 교실 △K-뷰티 실습 등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전일빌딩245, 5·18민중화운동기록

관, 빛고을농촌테마공원, 월봉서원, 목포 해양유물전시관 등 광주·전남 주요 기관과 협력해 5·18역사, 지역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시교육청은 교통수단 등을 지원해 맞춤형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생 글로벌 리더 동네 한바퀴는 지역대학, 지역사회가 학생들에게 세계시민으로서 가치를 알려주고, 다양한 주제별 체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며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광주·전남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 157명…5년 사이 30.8% 급증

의료대란 여파에 사망자 증가 우려 신장 이식 대기일 최대 7년 7개월 박희승 의원 “적극적 장기구득 필요”

광주·전남에서 장기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환자들의 대기일이 늘어나고 있는 게 원인으로 파악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보건복지부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는 2019년 120명에서 지난해 157명에서 5

년 사이 30.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지난해 2019년 47명에서 지난해 66명으로 늘었고 올해도 6월 기준 29명에 달했다. 전남에서는 2019년 73명에서 지난해 91명으로 늘었고 올해 6월 기준 59명으로 확인돼 광주와 전남 모두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우려된다.

전국 기준 장기종류별 사망자수는 신장 6994명(49.4%), 간장 5652명(39.9%), 심장 634명(4.5%), 폐 542명(3.8%), 췌장 320명(2.3%) 순이었다.

장기 이식 대기자 수 또한 지난해 2019년 3만2990명에서 지난해 4만3421명으로 1.3배 늘어난 가운데 의료대란 여파로 인해 장기 이식 대기 환자들의 평균 대기일

이 길어져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신장 이식을 받기 위해 2019년 2196일을 대기했다면 올해는 7년 7개월에 달하는 2802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은 대기일수가 1263일에서 2104일, 심장도 211일에서 385일로 늘어났다.

박희승 의원은 “장기 이식 순서를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너무 늦기 전에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이식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뇌사추정자 신고접수 후 빠른 출동을 통한 적극적인 장기구득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찬기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9년 연속 선정

인터넷 전남일보
www.jnilbo.com

모바일 전남일보
m.jnilbo.com